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738호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6100호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
○ 인천광역시조례 제6101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 인천광역시조례 제6102호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11
○ 인천광역시조례 제6103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인천광역시조례 제6104호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22
○ 인천광역시조례 제6105호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8
○ 인천광역시조례 제6106호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 인천광역시조례 제6107호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 인천광역시조례 제6108호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 인천광역시조례 제6109호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 인천광역시조례 제6110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 인천광역시조례 제6111호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 인천광역시조례 제6112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 인천광역시조례 제6114호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51
○ 인천광역시조례 제6115호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53
○ 인천광역시조례 제6116호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57
○ 인천광역시조례 제6117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 인천광역시조례 제6118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0
○ 인천광역시조례 제6119호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72
○ 인천광역시조례 제6120호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 인천광역시조례 제6121호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8
○ 인천광역시조례 제6122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81
○ 인천광역시조례 제6123호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83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 제3105호 다수인민원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87
- 인천광역시규칙 제3106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89
- 인천광역시규칙 제3107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94
- 인천광역시규칙 제310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13
- 인천광역시규칙 제3109호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26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801호 2019년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공모지방채 제안 공고 128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41호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2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42호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41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명 :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이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2조~제6조)
- 분과협의회 구성·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7조~제8조)
-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직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00 호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간사)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분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제8항에 따라 분과협의회를 둔다.

- ② 분과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의논을 거쳐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협의회의 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⑤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분과협의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분과협의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분과협의회의 기능) 분과협의회는 협의회 심의 사항에 대한 분야별 연구·검토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며,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나 분과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 ① 시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협의회, 분과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인천광역시 조례 (공 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 현장 부지휘관 직급을 타 시·도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현장소방인력 확충과 소방학교 이전사업 전담기구 신설을 위해 직급비율 및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난현장의 대응력 강화 및 선제적 화재예방 등 현장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2019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소방인력 147명을 증원(제2조)
 - 총 정원 : 6,665명 → 6,812명(147명 증)
 -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848명 → 2,995명(147명 증)
- 현장 부지휘관(소방위) 직급을 조정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직급비율 변경(별표 2)
 - 소방위 : 9% → 11%
 - 소방사 : 32% → 30%
- 소방학교 이전사업 전담기구 신설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 소방정 : 17명 → 18명(1명 증)
 - 소방령 이하 : 2,831명 → 2,977명(146명 증)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01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665명”을 “6,8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848명”을 “2,995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5% 이내	17% 이내	35% 이내	38% 이내	4% 이상	1%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9% 이내	81% 이상	19% 이내	81% 이상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 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8% 이내	11%이내	16% 이내	31% 이내	30%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 상 이 당 상	5급 상 당	6급 상 당	7급 상 당	8급 상 당
비 율	45% 이내	14% 이내	8% 이내	29% 이내	4% 이상

※ 비 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총 계	6,812					
정무직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3,598					
1급	1				1	
2급	1				1	
2급·3급	3	2	1			
3급	19	11		1	4	3
3급·4급	2	2				
4급	145	88	3	4	15	35
5급 이하 소계	3,418					
전문경력관 소계	9					
별정직 계	16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6	1	5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74					
연구관	30			23		7
연구사	144					
지도직 계	28					
지도관	5			5		
지도사	23					
소방직 계	2,995					
소방정	18	8		10		
소방령 이하 소계	2,977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제2조)
-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3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4조)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5조~제10조)
-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2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02 호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도시계획)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인천광역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센터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 · 호환성 · 안전성 ·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 · 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제공 등
3. 통합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 · 운영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 · 운영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 · 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 · 운영 계획(이하 “관리 ·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 ·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관계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시책)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보급
2.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3.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4. 스마트도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특별회계·기금의 설치 및 지방보조금 지급대상 조례를 열거하는 별표를 규정하고, 해당 별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기금의 설치와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학술용역이외에 기술용역 중 일부를 제외한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심의하고 있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용역심의위원회’로 하고, 매년 반복되는 용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용역의 정의에 관한 사항 및 심의대상 등 정비(제2조제1호,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 및 제27조 등)
- 특별회계, 지방보조금 및 기금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 삭제(제4조, 제32조 및 제89조 삭제)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03 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1. “용역”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조사·연구·개발 등을 말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학술용역예산 심의”를 “용역예산 심의”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를 “(용역심의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술용역”을 “용역”으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용역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용역심의위

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학술용역”을 “용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와 이에 준하는 기술용역. 다만, 정책적 판단 등이 필요한 기본계획(기본구상을 포함한다)용역, 사전타당성 용역은 제외한다.

제2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학술용역”을 각각 “용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89조를 삭제한다.

제90조제2항 중 “총괄기금관리관은 별표 5에 따른”을 “총괄기금관리관은”으로 한다.

별표1, 별표2 및 별표5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용역심의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따라 임명·위촉된 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용역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 개정이유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한 정의(제2조)
-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제6조)
-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제7조)
-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시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평가를 통한 가산점 부여 (제8조)
-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계약정보의 공개 (제9조~제10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04 호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협동조합
 - 마.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이란 기업규모 및 가격 경쟁력 등에

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의 장애인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소기업을 말한다.

4.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5.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이행 책임을 말한다.
6.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2. 시 소속 산하기관
3. 시 출자·출연기관

② 시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공공조달 시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① 시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희망기업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근로자의 권리보호, 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발주부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

③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① 시장은 사회적 경제기업과 희망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① 시장은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 기업은 사회적책임 평가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 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입찰참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행사 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근로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 서약서상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지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인천광역시의회 김종인 의원이 발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후 우리 시로 이송되어 온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3조)
- 인천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제9조)
- 지하시설물 등 안전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05 호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⑦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생활임금 결정기한 명시 및 위원회 기능 추가 등 생활임금 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생활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개념 정비
(제1조 및 제2조)
-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제3조)
- 생활임금 결정기한 명시(제4조제3항)
-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대상 조항 신설(제5조)
- 적용례를 두어 2019년 1월 1일 이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터 소급 적용(부칙 제2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06 호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소속”을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하여”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기관 소속의 직접 고용 근로자로 한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5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3조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 개정이유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에 대응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인 인천환경디자인센터를 설치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인천환경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환경디자인센터의 사업범위를 정함(안 제4조의2)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07 호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제7호까지”를 “제5호까지, 제7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 환경디자인센터(이하 “환경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2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지원센터”를 “지원센터, 환경센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도모하고 급진전하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 등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안 제4조)
-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 원활한 활동을 위한 부위원장 수 및 당연직 위원 구성원 변경(안 제8조)
- 기업지원 및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14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08 호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및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

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3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자유구역청장,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전담기관
의 장

제14조제1항제1호 중 “기술 관련”을 “기술, 창업에 관련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조례 (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 장기적인 내수 침체와 각종 비용 상승 여파로 소상공인의 소득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 사업 근거 마련.
-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을 신설함(제6조제12호)
-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09 호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

제11조제1항 중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를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이하 “연합회 지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를 “연합회 지회”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및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각각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주요내용과 잠재적 채무의 발생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제18조제1항)
-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제18조제2항)
-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제18조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10 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회보고) ① 시장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주요내용과 잠재적 채무의 발생 여부 등을 포함하여 의회에 보고한다.

②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의회에 보고한다.

③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효과적인 달성과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수입재원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안정적인 기금재원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 재원에 인천종합에너지(주)의 주식배당금을 추가함(제4조제4호)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11 호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천중합에너지(주)의 주식배당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 복무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며,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시간 확대, 자녀돌봄휴가 확대 등 공무원의 준수사항과 혜택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지켜야할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 육아시간 대상자 범위 및 사용시간 확대에 따른 계산방법을 규정함(안 제23조제4항)
- 육아 및 모성보호 시간 사용시 최소근무시간 및 사용방법을 규정함(안 제23조제12항)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수정함(별표 3)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제10항)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12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8조의2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연가가산”을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으로 한다.

제1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참·조퇴”를 “지각·조퇴”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참·조퇴”를 “지각·조퇴”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제23조제10항과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6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제4항의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항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별표 3 의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 산	배우자	10
-----	-----	----

별표 4의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을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원대상이 인천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한정함에 따라 타 시·도에서 우리시로 전입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1년간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조금이 전입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지원대상 요건 중 ‘인천광역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을 삭제함(안 제3조제3호)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14 호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여성근로자로서”를 “피해여성근로자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 제정이유

인천시민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방중심의 구강건강 증진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 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구강건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구강건강 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아동 치과주치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저소득층 틀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구강건강 증진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15 호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의 유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구강건강 증진사업
5.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은 「구강보건법」 제6조에 따른 세부계

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구강건강 증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구 보건소 및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2.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3. 학교 구강건강 증진 지원 사업
4. 저소득층 아동 치아건강 지원 사업
5. 구강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6. 「구강보건법」 제2조제3호의 구강관리용품 지원사업
7.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동 치과주치의)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에게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적 구강진료 등 지속적 진료 행위를 수행하는 아동 치과주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저소득층 틀니 지원)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 틀니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

장이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군·구,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 군·구 보건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구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효드림복지사업 도입 및 시행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 보호계층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인 효드림복지사업 신설 명시함(제2조제3호 신설)
- 효드림복지사업 명시함(제6장 신설)
- 사업의 실시 명시함(제27조 신설)
-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등, 사업 지원,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반환, 지원신청, 자격확인 및 대상자 결정, 명부관리, 지급 및 이용 등 명시함(제28조 신설)
- 다른 시·도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 매매 또는 양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시 지원 제외 명시함(제29조 신설)
- 효드림복지사업 지원 관리대장 작성·관리 명시함(제30조 신설)
- 사무의 위임 명시함(제31조 신설)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 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16 호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6호를 각각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효드림복지사업”이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 보호계층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난방연료비”를 “냉·난방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제6장(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7장(제30조부터 제38조) 및 제8장(제39조부터 제40조까지)을 각각 제7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8장(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제9장(제44조 및 제45조)으로 하며, 제6장(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효드림복지사업

제27조(사업의 실시) 시장은 사회적 보호계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 장려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효드림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등) ① 효드림복지사업의 사업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한다.

② 시장은 건강 및 위생관리, 여가활동, 전통문화와 그 밖에 효드림복지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효드림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효드림복지사업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효드림복지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⑥ 효드림복지사업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시·도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
2. 효드림복지사업을 매매하거나 양도한 사람
3. 그 밖에 효드림복지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제30조(관리대장) 시장은 효드림복지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3조(중전의 제28조) 중 “제27조”를 “제32조”로 한다.

제39조(중전의 제34조)제4호 중 “제33조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부터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28조 관련)

효드림복지사업지원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신청인 정보	성명	대상 유형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수급자 []차상위자		(남,여)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신청인 본인 여부		[]본인 []대리 신청인(위임장 필수)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드림복지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의2, 별지제7호)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그 서류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효드림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란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시 신청인의 서명 또는 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효드림복지사업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효드림복지사업 지원 및 관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득수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시 신청인의 서명 또는 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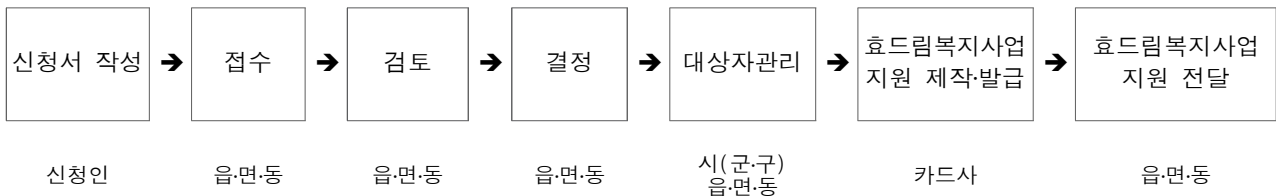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시 효드림복지사업 관련 정보 등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3쪽 중 제3쪽)

유의사항

1. 효드림복지사업 지원은 지정된 분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효드림복지사업 지원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효드림복지사업 지원관련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연도의 효드림복지사업 지원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인천광역시(군·구)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5. 효드림복지사업 관련 인천광역시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별지 제4호서식]

■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 조례 (제28조 관련)

효드림복지사업지원신청 위임장

수임자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위임자 (신청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드림복지사업의 지원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28조 관련)

효드림복지사업 지원대상자 명부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30조 관련)

효드림복지사업 지원 관리대장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설치한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전용사용료를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시설명, 기능 및 위치를 정함.(별표1)
-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전용사용료를 정함.(별표 2)
-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체육시설이용료를 정함.(별표3)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17 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별표 1의 제2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	남동체육관 삼동아시아경기장	체 육 관	주경기장	체 조 · 력 비 배드민턴·탁구 각종 경기 및 행 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0
			보조경기장		
		력 비 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다목적실내체육관			

별표 2의 남동체육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동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13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750,000 (400,000)	
	다목적실내 체육관	주간/야간	130,000	200,000	300,000	400,000	

별표 3의 체육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체육관	송림체육관	1회 3시간	일반 3,300 군인· 청소년 2,200 어린이 1,100	일반 2,600 군인· 청소년 1,800 어린이 900	* 다목적 실내 체육관 단체 는 동일소속 팀 20명 이 상
	계양체육관				
	남동체육관				
	강화고인돌체육관				
	선학체육관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				
	남동 다목적실내체육관	1회 2시간	일반	일반	

			2,000 군인· 청소년 1,400 어린이 800	1,600 군인· 청소년 1,100 어린이 600	
--	--	--	--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전문체육선수 양성 및 전문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선순위에 ‘시에 거주하는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을 신설함.

☐ 주요내용

○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시에 거주하는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등 체육활동(제4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18 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는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에 거주하는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 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 주요내용

- 운행 제한 대상지역을 규정함(제2조)
- 운행 제한 대상차량을 규정함(제3조)
- 운행 제한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를 규정함(제4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19 호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제4항 단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 제한 대상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
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상지역은 옹진군(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인천광
역시 전지역으로 한다.

제3조(운행 제한 대상차량) ①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
차의 운행 제한 대상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
서 제외한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차량
2. 그 밖에 시장이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4조(운행 제한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는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 제한 대상차량) 제3조제1항의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 대한 단속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예정에 따른 운영 및 비용부담 근거를 마련하고,
- 조례 제14조(유지관리비의 부담) 제2항 관련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중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 시 각 처리시설별 가동률에 따라 적용 요율 신설, 증설 공사비 적용 유예 등 배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공폐수처리시설 목록에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추가) (제3조)
-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 시 각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신설, 증설 공사비 적용 유예 등 적립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별표 2)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20 호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별표 2 제1호(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시설재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시설재투자적립금 (E) = $E_i \times F_i \times R \times C_i$

1) E_i :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 처리장 준공 이후 증가된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 처리장 증설 공사비용은 하자책임기간(상하수도 기기설치 기준)까지 미포함

2) F_i :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 2/1,000

3) R : 물가상승률(전년도 생산자물가지수 ÷ 준공년도 생산자물가지수)

4) Ci :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효율

$$- \text{처리시설 가동률}(\%) = \frac{\text{전월평균오·폐수발생량}}{\text{적립금 적용 처리시설 용량}} \times 100$$

- 적립금 적용 효율

구 분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효율					
처리시설 가동률(%)	0 ~ 20 이하	20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60초과~ 80이하	80초과~ 90이하	90 초과
적립금 적용 효율	0	0.2	0.4	0.6	0.8	1.0

※ 최초 준공 후 처리시설 가동률이 50%이하인 경우 시장은 운영 여건에 따라 적용 효율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및 사무실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및 사무실에 관한
규제 완화(별표1)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21 호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가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u>3명</u>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을 30퍼센트 완화한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 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u>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u> 1) <u>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u> 2) <u>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u>
라. 정비·성능점검 시설	·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출구 및 입구	·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 주 :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 나목의 전시시설의 구조는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강화하여 항만지구의 열악한 주변 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건축제한 제외 시설 중 도시형공장을 삭제함(제58조제2항제3호타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제한을 1~3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함(제58조제2항제3호타목2))
-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경우 보호지구에서의 건축을 허용함(제58조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22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제3호타목 중 “도시형공장, 기존공장”을 “기존공장”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3종”을 “5종”으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으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또는 교정·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 설치된 도시형공장에 대해서는 제58조제2항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신청한 도시형공장에 대해서는 제58조제2항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건축정책의 공공적 가치구현을 위하여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건축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건축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외의 시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개정함(제1조)
-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연령별 고른 주민참여 방안이 포함되도록 개정함(제4조제6호)
-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제4조제9호)
- 민간전문가(인천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의 명칭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및 제12조)
- 민간전문가(인천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6123 호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그 시행에”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건축정책 등에”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주민참여”를 “성별·연령별 고른 주민참여”로 한다.

제4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성별·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인천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주요 공공사업의 총괄조정 등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현황에 부합한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인천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인천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인천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발주·기본설계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자문

4.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중점관리

④ 인천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인천총괄건축가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 지역에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 ④ 시장은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인천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인천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공포)

☐ 제 명 : 다수인민원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 개정이유

본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민원 처리 규정」과 유사·중복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다수인민원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

다수인민원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규칙 제 3105 호

다수인민원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다수인민원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규칙(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2018.12.24.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9430호, 2018.12.24. 시행), 2019.1.8.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156호, 2019.1.8. 시행)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과 서식을 정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갑질 관련 행위기준(제13조의3 신설)

- 갑질의 개념, 갑질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금지함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소속기관·산하단체별로 유형화

나. 해외출장 부당지원 요구등 금지 및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 요구에 대한 처리 서식 마련(제14조의2 및 별지 제11호의2 서식 신설)

- 감독기관의 해외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 요구, 과잉의전 제공 요구 금지 및 피감기관의 거부조치 등 신설
- 부당한 출장지원 요구, 과잉의전 제공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이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 사용할 서식 마련

다.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 업무 규정 추가(제18조제1항)

- 행동강령 규칙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공무원이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는 행위유형에 신설된 규정을 반영

라. 행동강령 규칙 교육에 관한 사항 구체화(제22조제5항 신설)

- 시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동강령 규칙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규칙 제 3106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제13조의2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

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1호의2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규칙(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소방인재 양성을 위한 소방학교 이전 사업 추진단 신설 및 현장 대응단장 3교대 확대·시행에 따른 직급을 반영하고, 재난·화재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출동대 및 대시민서비스 점점 인력 보강 등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난현장의 대응력 강화 및 선제적 화재예방 등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소방인력 147명 증원(별표 1)
-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출동대 및 대시민 점점 서비스 인력 보강을 위해 소방직 정원 확충(별표 2 및 별표 4)
 - 현장대응인력 확충(106명) : 119안전센터 60명, 119구조대 24명, 119구급대 12명, 지역대 10명
 - 대시민 점점 서비스 인력 보강(41명) : 소방특별조사 15명, 소방안전교육 12명, 화재조사 3명, 교육훈련 3명, 119종합상황실 7명, 장비관리 1명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규칙 제 3107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총 계	6,812	2,169	100	3,029	305	1,209
정무직 소계	1	1				
정무	1	1				
시장	1	1				
일반직 소계	3,598	1,947	94	90	305	1,162
1급	1				1	
관리관	1				1	
2급	1				1	
이사관	1				1	
2-3급	3	2	1			
이사관·부이사관	3	2	1			
3급	19	11		1	4	3
부이사관	19	11		1	4	3
3-4급	2	2				
부이사관·서기관	2	2				
4급	145	88	3	4	15	35
서기관	60	39	3	2	6	10
기술서기관	27	11			6	10
서기관·기술서기관	55	38		1	3	13
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1			1		
기술서기관·어촌지도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	1					1
5급	574	362	16	10	64	122
행정	275	190	12	6	32	35
사회복지	2	1				1
사서	1					1
공업	36	10			4	22
농업	4	4				
녹지	15	6			2	7
수의	1	1				
해양수산	4	4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보건	5	4			1	
간호	1	1				
환경	7	6			1	
시설	106	61	2	1	16	26
방송통신	7	5			1	1
행정·사회복지	8	6				2
행정·사서	4					4
행정·속기	1		1			
행정·공업	9	3				6
행정·농업	5	1				4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3	3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23	20			3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학예연구	3					3
행정·방송통신	2	2				
행정·운전	1	1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7	3				4
농업·수의	2	2				
녹지·환경	1	1				
녹지·시설	1	1				
녹지·녹지연구	1					1
수의·수의연구	3			3		
해양수산·어촌지도	1					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1					1
보건·간호	4	4				
보건·환경	1	1				
환경·시설	1	1				
시설·방송통신	1				1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공업·방송통신	1	1				
행정·녹지·환경	3	1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해양수산·환경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공업·보건·식품위생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농업·해양수산·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6급	1,229	797	36	16	108	272
행정	471	345	25	7	39	55
세무	30	29				1
전산	56	43	1	2	4	6
사회복지	10	9				1
사서	4	1				3
공업	106	39			7	60
농업	13	9				4
녹지	23	12			3	8
수의	5	2		3		
해양수산	16	16				
보건	23	21			2	
간호	7	6		1		
환경	26	22			4	
시설	230	149	3		37	41
방송통신	21	13			4	4
행정·세무	4	4				
행정·전산	3	3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행정·사회복지	13	11	1			1
행정·사서	5	1				4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3	2			1	
행정·시설	16	14			2	
행정·학예연구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시설	11	2				9
녹지·환경	1	1				
녹지·시설	2	1				1
녹지·녹지연구	2					2
수의·수의연구	1			1		
해양수산·환경	2	2				
해양수산·어촌지도	6	1				5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2					2
보건·간호	5	5				
보건·환경	1	1				
보건·보건연구	1	1				
환경·시설	1	1				
시설·방재안전	2	2				
의료기술·약무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공업·환경	1	1				
공업·보건·환경	2	2				
농업·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운전	13	4	1	1	3	4
위생	1	1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속기	2		2			
방호	4	3	1			
토목운영	1					1
통신운영	3	1	1			1
전기운영	15	2				13
기계운영	35	1				34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14	4	1	1		8
7급	1,341	624	32	45	95	545
행정	422	265	20	10	33	94
세무	16	14			1	1
전산	40	23		2	2	13
사회복지	19	12				7
사서	13	1	1			11
공업	143	25	1	3	3	111
농업	15	6				9
녹지	30	11			5	14
수의	2	1		1		
해양수산	11	11				
보건	14	10		2	2	
간호	3	3				
환경	18	13	1		4	
시설	220	112	1	2	36	69
방재안전	3	3				
방송통신	26	14	1	1	4	6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6	4	1			1
행정·사회복지	7	6				1
행정·사서	5					5
행정·공업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행정·시설	14	13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송통신	1	1				
세무·전산	1	1				
전산·방송통신	3	3				
공업·환경	4	4				
공업·시설	15	3				12
공업·방송통신	1					1
농업·수의	1			1		
녹지·환경	1					1
수의·수의연구	7	2		4		1
해양수산·환경	1	1				
해양수산·시설	1	1				
해양수산·어촌지도	3					3
보건·간호	2	2				
보건·환경	1	1				
시설·방송통신	1					1
시설·방재안전	1	1				
보건·약무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2	2				
공업·보건·환경	1	1				
보건·약무·간호	1	1				
운전	47	12	3	7	2	23
간호조무	1	1				
위생	2			1		1
속기	1		1			
방호	10	1		1		8
전기운영	41	3		2		36
기계운영	83	1		1		81
열관리운영	4			2		2
화공운영	7					7
보건운영	1			1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사무운영	59	28	1	3	2	25
화공운영·보건운영	1			1		
8급	266	56	4	14	17	175
행정	86	21	1	3	13	48
전산	1	1				
사회복지	1	1				
사서	4					4
공업	78	2		1	3	72
녹지	2					2
해양수산	1	1				
보건	5	4		1		
간호	1	1				
환경	4	4				
시설	44	11			1	32
행정·사서	5					5
행정·보건	1	1				
행정·간호	1	1				
공업·환경	1	1				
녹지·시설	1	1				
녹지·녹지연구	1					1
보건·간호	2	2				
보건·환경	1	1				
운전	15	1		7		7
위생	1			1		
속기	3		3			
전기운영	1	1				
농림운영	1					1
사무운영	5	1		1		3
9급	8	3	1			4
행정	2	2				
사서	1					1
공업	2	1				1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시설	2					2
속기	1		1			
전문경력관 소계	9	2	1			6
나군	6	1	1			4
사진기사	1		1			
나병관리사	1	1				
무대감독	1					1
무대장치사	1					1
조명기사	2					2
다군	3	1				2
사진기사	1	1				
무대장치사	1					1
음향기사	1					1
특정직 소계	2,995	206		2,789		
소방직	2,995	206		2,789		
소방정	18	8		10		
소방령	82	27		55		
소방경	222	32		190		
소방위	314	33		281		
소방장	411	46		365		
소방교	767	42		725		
소방사	1,181	18		1,163		
별정직 소계	16	10	6			
1급	1	1				
관리관·별정	1	1				
4급	6	1	5			
별정	1	1				
서기관·별정	4		4			
서기관·기술서기관·별정	1		1			
5급	3	3				
비서관	2	2				
국제관계대사	1	1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6급	2	2				
비서	2	2				
7급	4	3	1			
비서	4	3	1			
연구직 소계	174	5		122		47
연구관	30			23		7
수의연구	2			2		
해양수산연구	1					1
보건연구	8			8		
환경연구	11			11		
학예연구	3					3
보건연구·환경연구	4			1		3
보건·환경·수의연구	1			1		
연구사	144	5		99		40
기록연구	2	2				
녹지연구	1					1
수의연구	9			9		
해양수산연구	7					7
보건연구	41			35		6
환경연구	56			49		7
학예연구	18	3				15
공업연구·환경연구	3					3
농업연구·수의연구	2			2		
보건연구·환경연구	4			4		
해양수산연구·어촌지도	1					1
지도직 소계	28			28		
지도관	5			5		
농촌지도	5			5		
지도사	23			23		
농촌지도	23			23		

[별표 2] 시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실·국·본부별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대 변 인	계		26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4
		6급	6	행정6
		7급	13	행정9, 공업1, 전기운영1, 기계운영1, 사무운영1
미디어 담당관	전문경력직	다군	1	사진기사1
	계		18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4
		6급	4	행정4
		7급	9	행정8, 전산1
시민정책 담당관	계		17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4
		6급	7	행정5, 시설1, 행정·시설1
		7급	5	행정4, 사무운영1
민관협치 담당관	계		11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3	행정3
		6급	4	행정4
		7급	3	행정3
혁신담당관	계		11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3	행정3
		6급	4	행정4
		7급	3	행정3
지역공동체 담당관	계		11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3	행정3
		6급	4	행정4
		7급	3	행정2, 행정·시설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감 사 관	계		51	
	일반직	3-4급	1	부이사관·서기관1
		5급	8	행정6, 시설1, 행정·시설1
		6급	34	행정20, 세무1, 전산1, 사회복지1, 공업1, 환경1, 시설7, 행정·사회복지1, 보건·보건연구1
		7급	8	행정6, 행정·사회복지1, 사무운영1
기획조정실	계		340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3-4급	1	부이사관·서기관1
		4급	13	서기관8, 서기관·기술서기관5
		5급	58	행정49, 시설3, 방송통신2, 행정·시설1, 행정·방송통신2, 행정·운전1
		6급	156	행정72, 세무27, 전산25, 농업1, 시설12, 방송통신3, 행정·세무4, 행정·전산3, 행정·시설4, 운전4, 통신운영1
		7급	110	행정43, 세무14, 전산15, 시설7, 방송통신4, 행정·세무2, 행정·전산3, 행정·보건1, 행정·시설1, 세무·전산1, 전산·방송통신1, 운전12, 사무운영6
		8급	1	행정1
시민안전본부	계		114	
	일반직	2-3급	1	이사관·부이사관1
		4급	6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4
		5급	20	행정10, 공업1, 시설2, 방송통신1, 행정·시설1, 행정·방재안전2, 보건·환경1, 행정·공업·시설1, 행정·시설·방재안전1
		6급	45	행정14, 전산5, 공업2, 농업1, 해양수산2, 보건3, 환경3, 시설3, 방송통신5, 행정·공업1, 행정·환경1, 행정·시설1, 전산·방송통신1, 공업·시설1, 시설·방재안전2
		7급	41	행정15, 전산1, 공업2, 농업1, 시설6, 방재안전3, 방송통신4, 행정·시설1, 행정·방재안전1, 전산·방송통신2, 공업·환경1, 시설·방재안전1, 보건·약무1, 행정·시설·방재안전2
		8급	1	운전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일자리경제 본부	계		215	
	일반직	2-3급	1	이사관·부이사관1
		3급	1	부이사관1
		4급	10	서기관5, 서기관·기술서기관5
		5급	46	행정26, 공업8, 농업4, 수의1, 시설1♪ 행정·공업3, 행정·농업1, 농업·수의2
		6급	89	행정50, 전산3, 공업21, 농업7, 수의2♪ 시설5, 행정·시설1
		7급	64	행정41, 공업11, 농업5, 수의1, 시설2♪ 행정·시설1, 공업·시설1, 수의·수의연구2
		8급	2	행정2
		9급	1	공업1
	별정직	5급	1	국제관계대사1
행정관리국	계		134	
	정무직	정무	1	시장1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서기관4,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18	행정15, 행정·시설2, 공업·시설1
		6급	44	행정26, 전산2, 사서1, 공업1, 시설5♪ 방송통신1, 행정·사회복지1, 위생1, 방호3♪ 사무운영3
		7급	39	행정25, 전산3, 공업1, 행정·공업1♪ 행정·방송통신1, 간호조무1, 방호1♪ 사무운영6
		8급	12	행정9, 전산1, 공업1, 전기운영1
		9급	2	행정2
	별정직	1급	1	관리관·별정1
		4급	1	별정1
		5급	2	비서관2
		6급	2	비서2
		7급	3	비서3
	연구직	연구사	2	기록연구2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보건복지국	계		130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서기관3,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26	행정8, 보건4, 간호1, 행정·사회복지4♪ 행정·보건2, 보건·간호3,♪ 공업·보건·식품위생1,♪ 행정·보건·약무·간호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1,♪ 보건·의무·약무·간호1
		6급	58	행정16, 사회복지5, 보건15, 간호6, 시설1♪ 행정·사회복지6, 보건·간호4,♪ 의료기술·약무1, 보건·의료기술·간호2,♪ 보건·약무·간호1, 보건·의무·약무·간호1
		7급	31	행정10, 사회복지5, 보건8, 간호3♪ 행정·사회복지1, 행정·보건1, 보건·간호2,♪ 보건·약무·간호1
		8급	7	보건4, 간호1, 보건·간호2
	전문경력직	나군	1	나병관리사1
여성가족국	계		88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3,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17	행정1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보건·간호1
		6급	35	행정25, 사회복지3, 보건2, 시설1♪ 행정·사회복지3, 보건·간호1
		7급	28	행정12, 사회복지6, 보건2, 시설2♪ 행정·전산1, 행정·사회복지4, 사무운영1
		8급	3	사회복지1, 행정·보건1, 행정·간호1
문화관광체육국	계		132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서기관4, 서기관·기술서기관3
		5급	25	행정20, 시설2, 행정·보건1, 행정·시설2
		6급	52	행정35, 공업1, 녹지1, 보건1, 시설10♪ 행정·사서1, 행정·시설2, 사무운영1
		7급	44	행정34, 전산1, 사서1, 공업1, 시설4♪ 행정·시설2, 사무운영1
	연구직	연구사	3	학예연구3

구 분	직 중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환경녹지국	계		167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5
		5급	30	행정3, 녹지6, 환경6, 시설2, 행정·환경3,♪ 행정·시설1, 공업·환경2, 녹지·환경1,♪ 환경·시설1, 행정·공업·환경2,♪ 행정·녹지·환경1, 공업·보건·환경1,♪ 공업·환경·시설1
		6급	63	행정11, 전산1, 공업5, 녹지9, 환경18,♪ 시설8, 행정·공업1, 행정·환경1,♪ 녹지·환경1, 녹지·시설1, 보건·환경1,♪ 환경·시설1, 행정·공업·환경1,♪ 공업·보건·환경2, 전기운영1, 기계운영1
		7급	52	행정8, 공업4, 녹지10, 환경13, 시설8,♪ 공업·환경3, 보건·환경1, 공업·보건·환경1,♪ 전기운영1, 사무운영3
		8급	14	행정4, 공업1, 환경4, 시설1, 공업·환경1,♪ 녹지·시설1, 보건·환경1, 사무운영1
교 통 국	계		128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서기관3,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19	행정11, 공업1, 시설2, 방송통신2,♪ 행정·시설1, 공업·시설1,♪ 행정·공업·방송통신1
		6급	56	행정25, 세무1, 전산4, 공업5, 시설12,♪ 방송통신4, 행정·시설2, 공업·시설1,♪ 행정·전산·시설1, 전기운영1
		7급	41	행정16, 전산1, 공업4, 시설8, 방송통신6,♪ 공업·시설1, 전기운영1, 사무운영4
		8급	5	행정4, 시설1
해양항공국	계		91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5	서기관1,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3
		5급	16	행정6, 해양수산4, 시설2, 행정·시설3,♪ 행정·해양수산·환경1
		6급	37	행정13, 해양수산14, 시설7,♪ 해양수산·환경2, 해양수산·어촌지도1
		7급	31	행정11, 해양수산11, 시설4, 행정·시설3,♪ 해양수산·환경1, 해양수산·시설1
		8급	1	해양수산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소방본부	계		206	
	특정직		206	소방정8, 소방령27, 소방경32, 소방위33,♪ 소방장46, 소방교42, 소방사18
도시재생 건설국	계		134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기술서기관4,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27	행정2, 시설22, 행정·시설1, 공업·시설1,♪ 녹지·시설1
		6급	46	행정7, 전산1, 공업2, 시설34, 행정·공업1,♪ 행정·시설1
		7급	52	행정7, 공업1, 녹지1, 시설39, 공업·시설1,♪ 사무운영3
		8급	2	시설2
도시균형 계획국	계		145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4
		5급	31	시설24, 행정·시설7
		6급	53	행정4, 전산1, 공업1, 녹지2, 시설43,♪ 행정·시설2
		7급	47	행정8, 전산1, 사회복지1, 시설32,♪ 행정·시설4, 사무운영1
		8급	7	시설7

[별표 4]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인재개발원	계		37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3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6	행정5, 시설1
		6급	8	행정5, 전산1, 간호1, 사무운영1
		7급	15	행정6, 전산2, 시설1, 운전1, 방호1♪ 전기운영2, 열관리운영1, 사무운영1
		8급	4	행정3, 위생1
보건환경 연구원	계		163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1
		5급	4	행정1, 수의·수의연구3
		6급	8	행정2, 전산1, 수의3, 수의·수의연구1♪ 운전1
		7급	25	행정3, 공업3, 수의1, 보건2, 방송통신1♪ 농업·수의1, 수의·수의연구4, 운전5, 위생1♪ 열관리운영1, 보건운영1, 사무운영1♪ 화공운영·보건운영1
		8급	3	공업1, 보건1, 사무운영1
	연구직	연구관	23	수의연구2, 보건연구8, 환경연구11♪ 보건연구·환경연구1, 보건·환경·수의연구1
		연구사	99	수의연구9, 보건연구35, 환경연구49♪ 농업연구·수의연구2, 보건연구·환경연구4
농업기술센터	계		33	
	일반직	7급	4	행정1, 시설1, 기계운영1, 사무운영1
		8급	1	운전1
	지도직	지도관	5	농촌지도5
		지도사	23	농촌지도23
중부소방서	계		297	
	일반직	7급	1	운전1
		8급	4	운전4
	특정직		292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20, 소방위30,♪ 소방장34, 소방교85, 소방사116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남동소방서	계		270	
	특정직		270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18, 소방위23,♪ 소방장38, 소방교72, 소방사112
부평소방서	계		317	
	특정직		317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19, 소방위26,♪ 소방장41, 소방교85, 소방사139
서부소방서	계		406	
	특정직		406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23, 소방위38,♪ 소방장55, 소방교104, 소방사179
공단소방서	계		290	
	특정직		290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19, 소방위26,♪ 소방장35, 소방교81, 소방사122
계양소방서	계		237	
	특정직		237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17, 소방위22,♪ 소방장29, 소방교64, 소방사100
미추홀소방서	계		288	
	특정직		288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19, 소방위26,♪ 소방장36, 소방교78, 소방사122
강화소방서	계		242	
	특정직		242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15, 소방위29,♪ 소방장32, 소방교64, 소방사97
영종소방서	계		228	
	일반직	8급	1	운전1
	특정직		227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17, 소방위25,♪ 소방장28, 소방교50, 소방사102
송도소방서	계		190	
	일반직	8급	1	운전1
	특정직		189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16, 소방위26,♪ 소방장33, 소방교38, 소방사71
소방학교	계		31	
	특정직		31	소방령3, 소방경7, 소방위10, 소방장4,♪ 소방교4, 소방사3

인천광역시규칙(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재난·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현장중심의 지휘체계 강화 등을 위해 소방본부와 소방서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본부 기능 조정 및 부서 신설(제15조)

- 현장대응과 → 현장대응단, 구조구급과 → 119재난대책과
- 소방학교이전추진단 신설

○ 소방서 산하 부서 조정(제24조)

- 대응구조구급과 → 119재난대응과

○ 영흥119안전센터 관할 소방서 변경(별표 2)

- 중부소방서 → 송도소방서

○ 부서별 분장사무 정비(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규칙 제 3108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관리

제7조제5항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군·구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5. 행정안전부 지원(협력) 업무
- 9.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관리·운영

제11조제4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아트센터인천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제11조제5항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항

9. 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제5항제9호 중 “대기 및 소음·진동”을 “대기”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생활소음”을 “비산먼지발생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대기·폐수·비산먼지발생사업장”을 “대기·폐수”로 하며, 같은 항 제32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현장대응과, 구조구급과”를 “119재난대책과, 현장대응단”으로, “119종합상황실 및 119특수구조단”을 “119종합상황실, 119특수구조단 및 소방학교이전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장대응과장·구조구급과장”을 “119재난대책과장, 현장대응단장”으로, “119특수구조단장”을 “119특수구조단장·소방학교이전추진단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8호,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방정책 기획 및 성과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17. 공유재산, 물품 관리·총괄에 관한 사항

18. 소방관서 신축·증축 등 공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6. 소방력 기준 및 보강에 관한 사항

27.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사무에 관한 사항

28.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등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9. 지역소방 전문치료센터 지정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제15조제4항에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시민안전교육 기본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7. 시민안전체험관 및 안전체험차량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8. 119소년단 등 어린이, 청소년 소방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9. 소방안전교육사 양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119재난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및 선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집행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수재난(화학, 생물, 방사능 등) 구조 대책에 관한 사항
4. 구조대 운영 및 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구조구급활동 실적 분석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6. 구급지도의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구조구급 관련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활안전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1. 생활안전활동 실적 분석과 관리에 관한 사항
12. 생활안전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구급대 운영 및 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5.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구조·구급관련 법률 검토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8. 시기·유형별 긴급구조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9. 인명구조사 시험 및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20.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훈련에 관한 사항
22. 소방현장 대응 업무의 종합 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3. 소방용수시설 확충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의용소방대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25. 산불방지 소방력 지원대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26. 풍수해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소방응원협정 체결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8.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29. 특별경계활동에 관한 사항
30.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
31. 경호, 중요행사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⑥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재난현장 총괄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
2.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난대비 긴급구조 현장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
5. 유형별 소방훈련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전술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8.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9. 재난현장 지휘체계 개선·평가에 관한 사항
10. 지휘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1. 소방업무 중 발생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12.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보호장비 및 진압장비 보강·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화재조사업무 운영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소방활동 검토회의에 관한 사항
16. 측정장비(감식기구) 보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7. 주요화재 합동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18. 화재통계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19. 화재조사요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0.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1. 소방차 출동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에 관한 사항
22. 소방장비·차량·호흡보호장비 점검·정비 및 비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23. 급식차, 세탁차 운영을 통한 현장활동의 원활한 지원에 관한 사항
24. 소방장비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5. 현장 지휘·조정을 위한 통합지휘차 운영에 관한 사항
26.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등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7. 지역소방 전문치료센터 지정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8.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소방현장활동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0. 개인보호장비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1. 현장소방활동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2.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3. 소방장비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4. 기동장비 보강·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제9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제6호 중 “분석 및 전망”을 “분석”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7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대응활동 기록·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27. 재난상황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재난현장 상황정보 수집·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29. 재난 긴급신고 공동대응기관 협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0. 119종합상황실 응급헬기 공동 활용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

한다.

1. 대테러 소방안전대책(훈련, 비상근무, 합동점검 등) 추진에 관한 사항
2. 대테러 유관기관(대테러센터, 국가정보원 등) 업무 협의·조정예 관한사항
3. 국가 중요행사(대테러) 및 대북 관련 소방력 배치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소방학교이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학교 이전에 필요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에 관한 사항
4. 단계별 훈련시설 등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5. 소방학교 이전·신축 공사 및 현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방학교 이전 사업에 관한 사항

제24조제1항 중 “대응구조구급과”를 “119재난대응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응구조구급과장”을 “119재난대응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응구조구급과장”을 “119재난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9호를 삭제한다.

2.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
25.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제6항제7호 중 “확보대책”을 “확보”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 제22호 및 제24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2. 재난대비 긴급구조 현장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

24.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재난현장 지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6. 현장활동 표준기법에 관한 사항
27.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28. 소방전술훈련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9. 소방업무 중 발생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30.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4조제7항 중 “119구조대, 119구급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119구조대, 119구급대”를 “119구조대”로, “119구조대장, 119구급대장”을 각각 “119구조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9구조대장, 119구급대장”을 “119구조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4조의3제4항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소방장대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제24조 관련)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 중부 소방 서	중앙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04(항동6가)	중구 : 중앙동, 해안동, 항동1가~6가, 관동, 송학동, 신포동, 도원동, 북성동, 선린동, 유동, 경동, 율목동, 용동, 사동, 답동, 신생동, 신흥동1가~2가, 선화동, 내동, 인현동, 항동7가 1~26번지 일원, 신흥동3가1~35, 36(36-0제외),39번지 일원 웅진군 : 연평면, 덕적면 , 자월면
	송현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동구 방죽로 39(송현동)	동구 : 송현동, 송림동 일부(8의10, 8의22, 8의23, 8의26~27, 8의78, 8의80, 8의257, 8의26, 2~263, 8의292, 8의299, 8의30 1, 8의309, 8의344, 8의3, 67~370, 8의386, 8의441, 8의4 45, 8의490, 8의564~568, 10의 6, 11, 12의3, 13의1, 18 의1, 19의1, 20의1~2, 20의4, 20의8, 20의15, 20의31, 264, 266의1, 294~297, 304, 305, 307, 310, 312, 318~ 320, 322, 324~333번지 일원)
	송림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133(송림동)	동구 : 금곡동, 창영동, 송림동 일부(8의10, 8의22, 8의23, 8의26~27, 8의78, 8의80, 8의257, 8의262~263, 8의292, 8의299, 8의301, 8의3 09, 8의344, 8의367~370, 8의386, 8의441, 8의445, 8의490, 8의5 64~568, 10의6, 11, 12의3, 13의1, 18의1, 19의1, 20의1~2, 20 의4, 20의8, 20의15, 20의31, 264, 266의1, 294~297, 304, 305, 3 07, 310, 312, 318~320, 322, 324~333번지 제외)
	만석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동구 제물량로 396(만석동)	동구 : 만석동, 화평동, 화수동 중구 : 전동, 송월동
	연안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118번길 114(항동7가)	중구 : 신흥동3가 36의0, 37~38, 40~84번지 일원, 항동7가 27~126번지 일원
	백령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남로 30	옹진군 : 백령면, 대청면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97(항동7가)	중부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소방정대	인천광역시 중구 연연부두로128번길 16(항동7가)	중구, 동구, 옹진군 지역 항만 일원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 남동소방서	구월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4(구월동)	남동구 : 구월동
	만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07(만수동)	남동구 : 만수동(만수2·3·4·5동)
	간석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21(간석동)	남동구 : 간석동
	담방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044(만수동)	남동구 : 만수동(만수1·6동), 수산동
	서창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0	남동구 : 서창동, 운연동, 장수동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4(구월동)	남동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인천 부평소방서	갈산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24(갈산동)	부평구 : 갈산동, 청천동
	부평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8(부평동)	부평구 : 부평동(부평1·4·6동, 부평5동 일부(10, 98, 104, 112~113, 115~116, 118~119, 124, 126~127, 132, 134, 136, 143~144, 156~158, 161, 165~167, 169, 171~172, 174~178, 188~191, 208~209, 364~369, 371, 376, 443 ~450, 452, 453~463, 466~510, 512~518, 915~916번지 제외))
	십정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111(십정동)	부평구 : 십정동
	산곡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198(산곡동)	부평구 : 산곡동, 부평동(부평2·3동)
	부개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6(부개동)	부평구 :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 부평동(부평5동 일부(10, 98, 104, 112~113, 115~116, 118~119, 124, 126~127, 132, 134, 136, 143~144, 156~158, 161, 165~167, 169, 171~172, 174~178, 188~191, 208~209, 364~369, 371, 376 443~450, 452, 453~463, 466~510, 512~518, 915~916번지 일원))
	삼산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252(삼산동)	부평구 : 삼산동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24(갈산동)	부평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인천 서부소방서	연희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2(심곡동)	서구 : 연희동, 공촌동, 심곡동
	가좌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678번길 17(가좌동)	서구 : 가좌동(가좌2·3·4동)
	신현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33-1(신현동)	서구 :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세어도 제외)
	석남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 102(석남동)	서구 : 석남동, 가좌동(가좌1동)
	검단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91(왕길동)	서구 : 마전동, 왕길동, 금곡동 일부 (금곡동 31-1~278-1, 640~720, 산17~34)
	오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229(오류동)	서구 : 오류동, 금곡동 일부(금곡동 212-2~237-2, 338-4~590-1 2), 원창동 세어도
	검암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74(검암동)	서구 : 백석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원당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81(원당동)	서구 : 불로동, 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청라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 한대로 77 (경서동)	서구 : 청라동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2(심곡동)	서부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정서진 119수난구조대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623(시천동)	경인아라뱃길(인천터미널 ↔ 별말교)
인천 공단 소방서	고잔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남동구 : 논현고잔동 일부(137, 139~150, 165~172, 223~272, 500, 511~515, 975번지)
	옥련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창랑로 55번길 7(옥련동)	연수구 : 옥련동, 청학동
	도림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667(남촌동)	남동구 : 도림동, 남촌동 연수구 : 선학동
	동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41(동춘동)	연수구 : 연수동, 동춘동
	논현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109(논현동)	남동구 : 논현1동 일부(1, 66~68, 109~111, 179, 549, 557, 651~682, 775번지 제외), 논현2동
	소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6-2	남동구 : 논현1동 일부(1, 66~68, 109~111, 179, 549, 557, 651~682, 775번지), 논현고잔동 일부(137, 139~150, 165~172, 223~272, 500, 511~515, 975번지 제외)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공단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인천 계양 소방서	작전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74(계산동)	계양구 : 계산동(계산3·4동), 용종동, 병방동, 서운동, 작전동(작전1동)
	계산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도로 557(계산동)	계양구 : 계산동(계산1·2동), 임학동
	장기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서로 14(장기동)	계양구 : 방축동, 박촌동, 동양동, 굴현동, 상야동, 하야동, 평동, 노오지동, 이화동, 오류동, 갈현동, 독실동, 목상동, 다남동, 선주지동, 장기동 일원
	효성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96-1(효성동)	계양구 : 효성동, 작전동(작전2동)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74(계산동)	계양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인천 미추홀 소방서	신기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주안동)	미추홀구 : 주안동(주안2·3·7동), 용현동(용현1·4동), 학익동
	주안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	미추홀구 : 주안동(주안1·6동), 도화동(도화1동)
	도화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 85(도화동)	미추홀구 : 도화동(도화2·3동), 주안동(주안5동)
	용현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376(용현동)	미추홀구 : 용현동(용현2·3·5동)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관교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450(관교동)	미추홀구 : 문학동, 관교동, 주안동(주안4·8동)
	숭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51 (숭의동)	미추홀구 : 숭의동(숭의1·2·3·4동)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226-1(학익동)	미추홀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인 천 강 화 소 방 서	강화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 23번길 11	강화군 : 강화읍, 선원면, 송해면
	길상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 93	강화군 : 길상면, 불은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 235-1	강화군 : 내가면, 양사면, 삼산면, 교동면, 하점면, 서도면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강화대로 879	강화소방서 북부권역 - 강화읍, 선원면, 송해면, 하점면, 양사면, 내가면, 교동면
	119산악 구조대	인천광역시 화도면 마니산로 785-2	강화소방서 남부권역 - 화도면, 길상면, 양도면, 불은면, 삼산면
인 천 영 종 소 방 서	공항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i>제2터미널대로 268</i> 464(운서동)	중구 : 운서동 일부(공항구역 내) 옹진군 : 북도면
	운서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현바위로27번길 16 (운서동)	중구 : 운서동 일부(공항구역 제외), 운북동
	운남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116(운남동)	중구 : 중산동, 운남동
	용유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서로128번길 1 (을왕동)	중구 : 남북동, 을왕동, 덕교동, 무의동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대교고속도로 3-1(운남동)	영종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 송도 소방 서	미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60번길 15(송도동)	연수구 : 송도동 일부(기초구역 21982~21993, 22000, 22011~22014, 22031)
	신송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92(송도동)	연수구 : 송도동 일부(기초구역 21994~21999, 22001~22010, 22015~22026)
	영흥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283-32	옹진군 : 영흥면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60번길 15(송도동)	송도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인천광역시규칙(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66호, 2018. 12. 21. 발령·시행) 개정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강화하고 인천형 긴급 복지모델인 SOS복지 안전벨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의 재산기준을 17,000만원 이하에서 18,800만원 이하로 변경(제2조제2호)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규칙 제 3109 호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17,000만원 이하”를 “18,800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9-801호

2019년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공모지방채 제안 공고

인천시 장기미집행공원 재원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방채를 공개모집 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서류를 2019. 4. 22.(월) 14:00까지 우리시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권명칭 : 2019년도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공모지방채
- 발행금액 : 600억원
- 발 행 일 : '19. 4. 26(금)예정
- 채권종류 : 고정금리부 무기명식 무보증 이표부 등록채권
- 원금상환 : 균분상환(년2회)
- 이자지급 : 6개월 후취(급), 고정금리
(표면금리에 의하여 1년 단위로 계산한 금액의 1/2 지급, 원단위 절사 단, 이자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함)
- 제출서류 : 인수제안서 1부, 인수확약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제출방법 : fax(032-440-8687) 또는 방문접수 *fax 전송시 접수 여부 확인전화 要
- 참여가능 금융기관 : 은행법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붙임 1. 인수제안 요청서 1부.
2. 인수제안서 1부.
3. 인수확약서 1부. 끝

2019. 4. 17.

인천광역시장

2019년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공모지방채 인수제안 요청서

- ☐ 채권명칭 :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지방채
- ☐ 발 행 일 : '19. 4. 26.(금)예정 *자금납입 완료
- ☐ 발행금액 : 60,000백만원

발행금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금리제안	비고
60,000백만원	'19.4.26 ~'22.4.25(3년)	'22.4.26 ~ '27.4.25 (5년)	국고5년물 + ()%	

- ☐ 채권종류 : 만기별 무기명식 무보증 채권 이표채
- ☐ 원금상환 : 균분상환(년2회)
- ☐ 이자지급 : 6개월 후취(급), 고정금리
(표면금리에 의하여 1년 단위로 계산한 금액의 1/2 지급, 원단위 절사 단, 이자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함)
-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수확약서 1부.
- ☐ 금리제안
- 금리산정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채권별 금리경쟁은 제안서 마감 전일 기준 국고채 5년물의 평균 유통수익률로 계산 (평균 유통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민간신용평가회사 평균)
 - 채권별 실제 차입금리는 채권발행 전일 기준(2014.11.2) 국고채 5년물의 평균 유통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
- ☐ 인수수수료 : 인수금액의()%(제안서에 표기)
- ☐ 금융기관 선정
- 채권별로 최저금리로 제안한 금융기관을 선정, 최저금리 제시 기관이 2개 이상일 때 조건판단(수수료 등) 후 지정
 - 최저금리 제안은행의 계약불가 통보 또는 중대한 과실 등에 따라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낮은 금리 제안 순으로 선정
- ☐ 제안서 제출기한 : 2019. 4. 22. 14:00한, fax(032-440-8687) 또는 방문접수
- ☐ 금융기관 선정 : 2019. 4. 24.
- ☐ 문의 :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지방채담당자 032) 440-3654

인 천 광 역 시 장

2019년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공모지방채 인수제안서

- ☐ 채 권 명 칭 :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지방채
- ☐ 인 수 금 액 : 금육백억원(금60,000,000,000원)
- ☐ 발 행 일 : 2019. 4. 26.(금)예정
- ☐ 원리금상환 : 균분상환(년2회)
- ☐ 이 자 지 급 : 6개월 후취(급)
(표면금리에 의하여 1년 단위로 계산한 금액의 1/2 지급, 원단위
절사 단, 이자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함)
- ☐ 금리제안

발행금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금리제안	비고
60,000백만원	'19.4.26 ~'22.4.25(3년)	'22.4.26 ~ '27.4.25 (5년)	국고5년물 + ()%	

- ☐ 인수수수료 : 인수금액의()%

*제안금리는 소수점 2자리 미만 절사
위와 같이 지방채 인수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9. 4.

제안자 : ○ ○ ○ (법인인감)

인천광역시장 귀하

인 수 확 약 서

() 증권사(이하“당사”), ()은행은 인천광역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채권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래 확약금액 및 인수 시 제안한 금리로 발행일에 책임 인수하고 2019.4.26.까지 자금을 납입 한다.

○ 확약금액 및 이율

발행금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금리제안	인수수수료	비고
60,000백만원	'19.4.26 ~'22.4.25(3년)	'22.4.26 ~ '27.4.26 (5년)	국고5년물 + ()%	인수금액의 ()%	

☐ 당사의 귀책사유로 채권 미인수 등 위 확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당사는 손해배상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2019. 4.

()투자증권 (법인인감)

()은행 (법인인감)

인천광역시장 귀하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41호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천시 상징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시 상징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시 상징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징물 중 ‘캐릭터’를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 나. 시장은 시 상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4, 팩스 032-440-8763, 이메일 jjpupp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3조의 상징물을 인천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생략)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u><신 설></u>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③ 시장은 제3조의 상징물을 인천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4-23>

1. 심벌마크 : 별표 1 <개정 2017-03-06>
2. 도시브랜드 : 별표 2 <개정 2017-03-06>
3. 캐릭터 : 별표 3
4. 시조 : 두루미(학)
5. 시화 : 장미
6. 시목 : 목백합
7. 시색 : 청색(인천블루)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용 여건에 맞는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04-23>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28>

제6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7-03-06]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징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체계 및 각종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4. 상징물과제의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상징물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징물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7-03-06]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홍보·관광·브랜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문화 또는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브랜드·마케팅·홍보·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본조신설 2017-03-06]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03-06]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03-06]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브랜드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하며,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상징물 관련사업)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사업
2. 주요사업이나 행사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18조 각 호에 따른 관련 행사 등에 상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03-06>

②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상징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고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 미디어담당관 장훈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우리 사회에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다. 기부증서의 발급 및 기부자의 명단 작성·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명예의 전당 설치, 시 주관 행사 초청, 표창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인천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4, 팩스 032-440-8763, 이메일 jjpupp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관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시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6조제6호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의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자치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차관인 부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도 및 시·군·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일반 위원회처럼 심도 있는 심의가 불필요함으로 현재까지 서면 심의로
하고 있음.

☞ 기부위 심의 대상 중 80% 이상이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으로 기
탁하고 있고, 15%는 소방서에 물품으로 기탁 하고 있으며, 나
머지 5%정도는 시 본청(부서)에 금품으로 기탁하는 경우가 간
혹 있음.

☞ 장학금 기부자(개인, 회사)에게는 인재육성재단과 시(총무과)가 공
동으로 명예의 전당을 운영함으로 예우하고 있음.

(시 : 시청 1층 공간 및 전원, 랜선 등 설치 , 인재육성재단 : 10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 이름 및 회사로고 기념패를 제작 명예의 전당
에 등록)

4. 작성자

소통협력관 민관협치담당관 박 재 성